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도자료**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1년 9월 6일(월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6일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1. 9. 3(금) | 담당부서 | 디지털경제통상과<br>신남방통상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경수 과장(044-203-5630)<br>김범수 과장(044-203-5710) | 담 당 자 | 이채원 사무관(044-203-5631)<br>박찬서 사무관(044-203-5718) |

# 「한국, 9월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* 가입의사 통보」

## 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 한-싱 통상장관 회담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 가입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위한 협력 논의 -

*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 :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CPTPP) 가입국인 싱, 뉴, 칠 3개국간 디지털 통상 주요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('20.6월)한 디지털무역협정

□ **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9.6(월) 간 킴 용(Gan Kim Yong)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, **한국이 9월 중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(DEPA)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**이라고 밝힘

○ DEPA(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ent)는 CPTPP 가입국인 **싱가포르, 뉴질랜드, 칠레** 3개국간 **디지털 통상의 주요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**를 위해 체결('20.6월)한 **디지털 무역협정**으로,

○ **전자상거래 원활화, 데이터 이전 자유화, 개인정보보호**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수준높은 디지털 규범**과 함께 AI, 핀테크 등 **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**을 포괄적으로 규정함

□ 여 본부장은 "DEPA는 **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**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의 **새로운 틀을 제시**한 **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**으로

○ 과거 P4(싱·뉴·칠·브루나이)가 CPTPP(11개국)로 발전되었던 바와 같이 **DEPA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**이 되어 **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가능성**이 높다"고 평가하며,

○ 한국은 지난 8월 국회 보고를 통해 **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**한 바, **9월 중**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**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**이라고 언급함

□ 또한, 여 본부장은 "한국은 전통적인 IT 강국으로,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**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(DPA) 협상이 마무리 단계**에 있는 등 **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중**"임을 강조하며,

○ **싱가포르**는 **DEPA 회원국 중 하나**이며, **호주·영국** 등과도 협력하여 **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**하는 국가로 디지털 규범 논의에 있어 한-싱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바,

○ **한-싱 DPA**를 통해 규범적 측면과 함께 **기술협력**과 **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** 등 **실질적인 협력**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,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**조속히 협상을 마무리**하기를 촉구함

□ 한편, 여 본부장은 **아시아 태평양 지역**은 **미래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축**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**역내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**되고 있는 바,

○ 한국, 호주, 미국, 싱가포르, 뉴질랜드 등 **유사 입장국**(like-minded countries)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**한-싱 양국이 긴밀히 공조**해 나갈 것을 제안함

○ 이에 **간 킴 용 장관**도 **싱가포르**는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**아태지역 역내 주요국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**한다고 화답하며,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**한국과의 협력을 강화**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

□ 또한 양측은 **코로나 확산,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, 기후변화 대응 등**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**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**에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,

○ 디지털 협력 외에도 **보건·백신, 전기차 등 신산업,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**해 나가기로 함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채원 사무관(☎ 044-203-5631), 신남방통상과 박찬서 사무관(☎ 044-203-57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